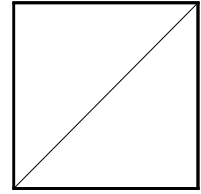


공 개



| | | |
|--------------|---------------------------|------------------|
| 의안번호 | 제 384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0. 11. 18. (제 20 차) | |

현대카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은 성 수 |
| 제출연월일 | 2020. 11. 18. |

1. 의결주문

현대카드(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현대카드(주)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선임·해임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현대카드(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43조(과태료)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0.8.21.) 심의필

<별지>

현대카드(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현대카드(주) : 과태료 3,600만원 부과

☐ 개인에 대한 조치

- HR기획팀장(퇴직) ○○○○ : 과태료 800만원 부과
- HR기획팀장(現 실장) ○○○○ : 과태료 160만원 부과
- HR기획팀장(現 팀장) ○○○○ : 과태료 160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현대카드(주)는 '16.8.1.~'18.1.1. 기간 중 ○○○○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동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해임 관련 위반 내역

| 순번 | 성명 | 선임· 해임(사임) | 사유 발생일 | 기한일 | 공시일 | 보고일 |
|----|-------|---------------|-------------|-------------|-------------|-------------|
| 1 | ○○○ | 사임 | 2016.8.1. | 2016.8.10. | 2016.10.18. | 2016.10.18. |
| | ○○○* | 선임 | | | 미공시 | 미보고 |
| 2 | ○○○* | 선임 | 2016.11.1. | 2016.11.10. | 미공시 | 미보고 |
| 3 | ○○○ | 사임 | 2017.1.23. | 2017.2.3. | 2019.4.16. | 2019.4.16. |
| 4 | ○○○ | 선임 | 2017.2.13. | 2017.2.22. | 2017.12.1. | 2017.12.1. |
| | ○○○** | 선임 | | | | 2017.2.21. |
| 5 | ○○○ | 사임 | 2017.6.5. | 2017.6.15. | 2017.7.26. | 2017.7.26. |
| 6 | ○○○ | 사임 | 2017.6.19. | 2017.6.28. | 2019.8.26. | 2019.8.26. |
| 7 | ○○○ | 선임 | 2017.11.22. | 2017.12.1. | 2017.12.15. | 2017.12.15. |
| 8 | ○○○ | 선임 | 2018.1.1. | 2018.1.10. | 2018.4.30. | 2018.4.30. |

* 검사 착수일(2019.8.29.) 이후 2019.10.25. 및 2019.10.29.에 각각 공시 및 보고

** 임원 선임사실은 기한내 보고하였으나 공시를 지연함

< 관련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붙임 1>

관 계 법 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10.19. 시행 이후의 것)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생략)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4. (생략)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4. (생략)

5. 주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사실을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7.10.19. 시행 이전의 것)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1.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9. 시행 이후의 것)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 1,800 |
|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 | 1,800 |
| 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400 |

□ 舊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9. 시행 이전의 것)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1호 | 1,000 |
|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2호 | 1,000 |
| 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11호 | 1,000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 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시행)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 임원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 금액을 말한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위반결과 \ 동기 | 상 | 중 | 하 |
|-----------|--------------|-------------|-------------|
|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80% | 법정최고금액의 60% |
|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80% | 법정최고금액의 60% | 법정최고금액의 40% |
|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60% | 법정최고금액의 40% | 법정최고금액의 20%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4.29. 개정 이전>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020.4.29. 개정 이후>

제21조(기타 조치)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 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舊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17.10.19.시행 이전의 것)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 사. (생략)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위반결과 \ 동기 | 고의 | 과실 |
|-----------|--------------|-------------|
|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
|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
|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20>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개정 2013.12.20>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하며, 나.(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7.25.>

나. 감경 사유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주)
2. 제재조치일 : 2020. 11. 20.
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
|------|--------------------------------------------------------------------|
| 기관 | 과태료 5,040만원 부과 |
| 직원 | 2명(각각 주의 및 과태료 160만원 부과) |
| 前직원 | 2명(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800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4. 제재대상사실

(1)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현대카드(주)는 '16.8.1.~'18.1.1. 기간 중 ○○○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도 동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2)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현대카드(주)는 '16.3.12.~11.11.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소관부서 | 금융정책과 | 여신금융검사국 |
| 연 락 처 | 02-2100-2833 | 02-3145-8801 |